

복지태도의 세대 간 균열 연구: 연령효과와 분리된 코호트 효과와 그 요인의 분석*

조남경**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년간 복지태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러한 변화에 세대효과가 작용하고 있는지, 세대효과를 다시 연령효과와 코호트 효과로 분리하였을 때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코호트 효과의 배경요인으로서 세대 간 가치관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복지태도의 동학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가치관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20년간 친복지의 태도가 강화되고 있고, 밀레니얼/Y세대는 이전 세대들보다 더 강력한 국가복지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세대효과는 연령효과보다는 코호트 효과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코호트 효과의 배경으로서의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단절적이고 급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세대는 없이, 과거 세대로부터 최근 세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까지는 국가복지의 강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특히하게도 한국의 복지태도는 10개국 중 가장 높은 소득격차 선호와 가장 높은 정부 복지책임 확대 선호를 나타내는 모순성을 보여,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 온 한국 복지태도의 비일관성과 비계급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모순성은 특히 한국의 밀레니얼/Y세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한 경쟁에 내몰려왔던 우리 청년층이 경쟁과 차별을 내면화한 모습을 드러내었고, 다른 한편 향후에도 우리 복지태도가 복지 확대를 위한 우군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복지태도, 세대효과, 연령효과, 코호트 효과, 가치관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8017103).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 문제제기

2000년대 후반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의 보수화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20대의 젊은 층이 보수 성향의 후보나 정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 선거 결과로부터 촉발되고, 정치(학)계를 진원으로 확산되어 온 이 논쟁은(이준한, 2014),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발견되거나 인정되는 현상으로 자리잡는 듯하다(오찬호, 2013).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사회복지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보다 친복지의 태도와 연결시켜 이해해왔는데, 젊은 층의 보수화는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지지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가? 과연 젊은 층은 보수화되고 있으며, 세대 효과에 따라 친복지 태도는 약화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한 시도이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복지태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세대 간의 인식 차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그간의 복지태도 및 복지의식 연구에서 다소 미진했던 동학(dynamics)의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20년 동안의 우리나라와 주요 복지국가들의 복지태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변화의 추동요인으로 세대 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복지태도에서의 세대 효과, 그 중 연령 효과와는 달리 그간 연구가 부족했던 코호트 효과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하여 그러한 코호트 효과는 주로 각 사회의 고유한 경험과 특성인지, 아니면 보다 보편적인 경험과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복지태도는 일차적으로는 복지의 제반 이슈들 혹은 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의식과 태도를 뜻하지만, 동시에 특정 집단이나 한 사회 전체가 가진 집합적인 경향을 지칭하기도 한다. 사회복지 연구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주제로서, 해외의 경우는 1980년대 이후, 국내의 경우는 1990년대부터 보다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한 사회의 복지태도가 복지정책의 결정과정과 관련한 사회적 여건을 좌우함으로써 의제의 선정, 정책의 선택, 그리고 결정된 정책의 정당성, 즉 국민 지지의 확보에 영향을 끼치는, 복지 정치의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해 왔다(최균·류진석, 2000; 안상훈, 2009; 박찬웅 외, 2014; Cnaan et al., 1993; Pfau-Effinger, 2005).

그간의 복지태도 연구는 결정요인, 곧 균열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하여, 개인 수준에서는 성별, 연

령, 소득수준, 계급, 취업여부,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적 성향, 복지 지위 등이, 국가 수준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 복지지출 수준 등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왔다(김상균·정원오, 1995; 김희자, 1999; 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류진석, 2004; 안상훈, 2009; 이훈희 외, 2011; 김수완 외, 2014; 박찬웅 외, 2014). 하지만, 상대적으로 변화의 측면에는 소홀한 점이 있다. 물론 소수의 연구가 복지태도의 변화 궤적을 추적하고자 했지만(예로, 이현주 외, 2013), 대상 기간이 10년도 안 될 정도로 짧은 등 아쉬움을 남겼다. 이는 복지태도 및 복지인식 연구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본격화된 분야인 만큼 연구의 절대량도, 충분한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도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복지의 정책과 이슈를 둘러싼 여론 및 지지-반대의 지형을 보여줌으로써 복지 정치의 분석과 예측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복지태도 연구의 중요한 한 의미라고 할 때, 복지태도의 동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은, 특히 복지 정치의 예측과 전망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식이나 태도의 동학을 이해하는데 빠질 수 없는 세대 효과의 분석을 시도한 소수의 연구들은 더욱 주목받을 만한데, 이들 대부분은 복지태도 변화의 한 요인으로 세대 효과에 주목하였지만, 주로 연령 효과를 확인하는데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 Busemeyer 외(2009)은 복지지출 선호에 대해 소득보다 더 뚜렷한 연령별 세대 그룹의 영향력을 14개 OECD 국가에 대한 1996년 ISSP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주었고, 김수완 외(2014)의 경우 2010년 복지패널 데이터를 통해 연령대가 높을수록 분배보다 성장 지향적인, 그리고 보편적이기보다 선별 지향적인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세대 효과를 보고하였지만, 이들은 모두 생애주기에 따른(혹은 나이 들어감에 따른) 복지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세대 효과에 보다 천착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세대 효과에는 각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화에 기인하는 ‘코호트 효과’와, 생애주기 단계나 연령에 따른 ‘연령 효과가 혼재되어 있고, 여기에 관찰시점이 가진 ‘기간 효과’ 또한 섞일 수 있어 분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박재홍, 2001; 전상진, 2004; Sorensen, 2013).

그런데, 여기서 연령 효과가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다면, 개인적으로는 변화의 과정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꼭 동태적인 움직임으로 표출되지는 않을 수 있다. 물론, 세대별 인구 수의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연령 효과도 어느 정도 사회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에 코호트 효과는 특정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그 이전, 그 이후, 혹은 그 이전과 이후 세대와는 차별적인 세대가 출현하는 순간, 해당 세대의 연령과 상관없이, 전체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세대 효과를 볼 때에는 연령 효과보다는 코호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선행 연구들의 아쉬움이 있다.

이상록과 김형관(2013)은 이같은 문제점을 짚으면서 세대 간 복지태도의 원인으로 사회화 과정의

결과로서의 사회의식이나 정치태도에 주목함으로써 연령 효과와는 다른 코호트 효과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우선 복지태도에 연령 효과는 다른 코호트 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더하여, 예를 들면, 복지 증세에 우호적인 산업화 세대, 복지 대상범위 확대에 우호적인 민주화 세대, 복지 지출 확대에 우호적인 신세대 등, 세대 간 복지태도에 균열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신세대로 올수록 친복지의 태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연구자들 스스로가 강조했던 것처럼,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종단적 데이터를 통한 변화의 추적이 중요한데, 한 시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한계가 컸고, 또한 교육 수준과 이념 성향을 코호트 효과의 발생 맥락으로 지목은 하였으나, 그들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과 설명이 생략된 아쉬움도 남겼다.

한편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국가별로 또 시기별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백정미 외, 2008; 김영순·여유진, 2011; Svallfors, 1997; Andreß & Heien, 2001; Arts & Gelissen, 2001; Busemeyer et al., 2009). 조남경(2013)은 이에 대해 복지의 발달 과정에 따라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및 그 설명력이 다르고 또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계급 간 균열이 복지 국가 형성 및 발전을 추동했던 사회일수록 계급요인이 복지태도에 대해 강한 설명력을 나타내지만, 이후 복지의 제도화가 진전될수록 복지 지위나 노동시장의 지위가 점차 설명력을 얻게 되며, 한편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공적 부문 중심인지 사적 부문 중심인지에 따라 공사 부문 간 균열이, 그리고 공적 부문이 여성 지배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시 성별의 설명력이 힘을 더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낮은 설명력이나 상충하는 결과들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 즉, 복지의 발전이 특정한 계급이나 세력 간 갈등을 중심으로 추동되지도 않았고, 사회복지가 만들어내는 사회 층화의 결과가 아직은 주된 사회의 균열을 형성하지는 않은 우리 현실이 그간의 복지태도 연구결과에 반영되어 온 것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 국가의 복지태도와 변화, 결정요인과 결정구조는 비교의 시각에서 각 사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간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복지태도의 결정요인들은 크게 이해(interest) 측면의 요인들과 가치(values) 측면의 요인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Blekesaune & Quadagno, 2003; Jo, 2011), 이 중 기존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부분 이해 측면의 요인들을 밝히는데 집중해 왔다(정현태·오윤수, 2009; 최유석, 2011). 이는 경험적인 자료로부터 ‘태도’와 구분되는 ‘가치’를 추출해내는 것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바가 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의 ‘가치 체계’로서의 사상이나 종교보다는 가볍고(추상 수준이 낮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즉 이해 측면의 요인들에 영향받는 ‘태도’보다는 무거운(추상 수준이 높은), ‘가치(관)들’의 존재를 바탕으로 ‘한

사회에 깊고 넓게 배태되어 느리게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societal values)'을 개념화하고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추출해 온 시도이다(Hofstede, 2001; Jo, 2011; Hudson et al., 2015). 왜냐하면, 복지태도에 세대 효과가 있다면, 그리고 이를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로 분리해서 본다면, 연령효과는 아무래도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욕구와 조건과 상황, 즉 이해의 측면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인데 반해, 특정 세대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화에 기인하는 코호트 효과는 가치 측면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으로 추측되고,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인 코호트 효과와 관련하여 이를 일부라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가 과연 세대 간에 나타나는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가치관의 세대 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태도의 동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네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주요 복지국가들에서 복지태도는 지난 20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꾸준히 참여해 온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이하 WVS)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전 연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복지태도의 변화의 궤적을 살펴본다. 둘째, 복지태도의 변화에 세대 효과, 특히 코호트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위해 이전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세대 효과를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로 분리하여 확인해 본다. 셋째, 그러한 코호트 효과의 배경 요인은 가치 측면에서 찾아지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 사회에 깊게 배태되어 쉽게 변화하지 않는 문화적 문맥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관을 도출해보고, 세대 간에 이러한 가치관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끝으로, 복지태도의 변화와 세대 간 균열 및 코호트 효과는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이며 얼마나 각 사회의 고유한 경험과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인가? 이를 위해 10개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복지태도의 균열과 코호트 효과 및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 검토한다.

3. 데이터와 연구방법

인식 혹은 태도라는 개념은 많은 경우 질적 접근이 보다 적절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본 연구의 주제는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인식이나 태도를 깊이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집합적' 태도, 즉 일반적인 경향성의 파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 분석하고,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해 주는, 즉 시계열의 특성을 가진 동시에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양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데이터는 우리나라가 1982년 1차 조사부터 2010년 6차 조사까지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는 세계가치관조사(WVS)의 데이터와, 해당 조사와 협력관

계에 있는 유럽가치관조사(European Values Study)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세계가치관조사는 인식이나 태도의 측면에 중점을 둔 국제조사로서는 국제사회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와 함께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참여 국가의 수나 문항의 수로는 국제사회조사를 능가한다. 또한, 유럽가치관조사와 협력관계에 있어 데이터를 합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범위한 국가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Inglehart, 2000). 비패널 확률표집 방식의 조사로 표본의 질도 나쁘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산업화된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표본 편증을 바로잡기 위한 가중치 변수 적용 여부가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Halpern, 2001) 전반적인 표본의 질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Larsen, 2006).

본 연구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와 유럽가치관조사의 데이터들을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1개국, 506,268 케이스를 갖는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하여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Arts와 Gelissen(2002)의 네 가지 복지체제와 데이터 현황을 고려하여, 각 체제별 두 국가씩 총 8개국과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이태리, 스페인, 일본, 그리고 한국의 10개국, 총 80,723 사례의 데이터를 분석 데이터로 삼았다. 세계가치관조사의 차수(wave)를 중심으로 6개의 시점으로 나누었으며, 각 차 조사는 국가별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 대해 동일한 연도와 간격으로 구성될 수는 없었으나, 편의상 6개의 시점을 1981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그리고 2010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표 1 참조).

[표 1] 데이터의 구성(10개국 6시점)*

구분	시점1 (1981)	시점2 (1990)	시점3 (1995)	시점4 (2000)	시점5 (2005)	시점6 (2010)
핀란드	1981**	1990**	1996	2000**	2005	2009**
스웨덴	1982**	1990**	1996	1999**	2006	2009
프랑스	1981**	1990**	-	1999**	2006	2008**
독일	1981**	1990**	1997	1999**	2006	2013
이태리	1981**	1990**	-	1999**	2005	2009**
스페인	1981**	1990	1995	2000	2007	2011
영국	1981**	1990**	1998	1999**	2005	2009**
미국	1982**	1990**	1995	1999	2006	2011
일본	1981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1982	1990	1996	2001	2005	2010

*WV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되, **는 EVS 데이터임.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의 복지태도를 살펴본다. 하나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이다. 두 가지 모두 복지태도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지표들로, 예를 들면, 전자는 Svallfors(1997)나 Arts와 Gelissen(2001)의 연구 등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며, 후자는 복지정서(welfare sentiment, 예로, van Oorschot, 2006)나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attitudes to welfare responsibility, 예로, Gundelach, 1994) 등의 이름으로 연구되어 왔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두 지표 모두 10점 척도의 개별 문항으로 물어지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1990년 2차부터 2010년 6차까지의 조사에서 데이터가 축적되어 약 5년 주기로 20년의 변화 추적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문항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의 경우, “1이 소득은 보다 평등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10이 유인(incentive)으로서 보다 큰 소득격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의미할 때 당신의 입장은 어디쯤에 해당합니까?”이고,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는, “1이 정부가 모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고, 10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일 때, 당신의 입장은 어디쯤에 해당합니까?”이다.¹⁾

앞서 세대 효과에는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 그리고 관찰시점이 갖는 기간 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연구의 데이터는 다중의 시점에서 수집된 만큼, 기간 효과는 어느 정도 상쇄 혹은 배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복지태도에 대한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는 시각적 방법과 통계적 방법의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째, 시각적 방법은 Heinemann(2007)의 연령대별 분석도표(age profile)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시계열적 속성을 가지나 패널은 아닌 데이터를 가지고도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적 검증은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 온 복지태도의 결정요인들을 통제하면서 세대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회귀 모델을 기본으로 하였다.

세대 효과 분석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바로 ‘세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특히 국가 간 비교를 염두에 두는 본 연구에서의 세대 구분의 기준 마련은 우리 사회를 넘어 타 국가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더하여 세대 정의 및 구분에 대한 권위있는 혹은 합의된 내용은 찾기 어려우며(이상록·김형관, 2013), 실제 세대 연구에서는 연령 구분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된다(예로, Busemeyer et al., 2009; 성경룡, 2015). 하지만, 앞서도 논의한 것처럼 복지태도의 동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연령 효과보다는 코호트 효과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복지태도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는 소위 ‘연령별 세대’보다는 ‘정치사회적 세대’ 구분에 따른 분석이 절실하다는 이상록과 김형관(2013)의 주장이 타당한 면이 있다. 본

1) 분석에서는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였다.

연구에서는 우리 국민을 산업화 세대(1957년 및 그 이전 출생), 민주화 세대(1958년부터 1971년 사이 출생), 신세대(1972년 및 그 이후 출생)로 구분한 이상록과 김형관(2013)의 연구도 참고하고, 대응되는 서구의 세대구분 논의(Fishman, 2016)에서는 주로 Baby-Boomer 세대(대략 1940년대 중반 ~ 1960년대 초중반 사이 출생), X 세대(Generation X, 대략 1960년대 초중반 ~ 1970년대 후반 사이 출생), 그리고 Millennials(혹은 Generation Y, 대략 1980년대 초반 이후 출생) 등이 등장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며, 한편 데이터 현황도 살펴 다음과 같은 다섯 세대를 구분하였다.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1945년까지의 세계대전 경험 세대; 1946년부터 1955년까지의 전후/냉전1 세대; 1956년부터 1965년까지의 베이비붐/냉전2 세대; 1966년부터 1975년까지의 탈냉전/X세대; 1975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Y세대.

한 사회에 뿌리깊게 내재화된 ‘사회적 가치관(societal values)’들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시공간적 비교가능성 검사(comparability test), 간-수준 등가성 검사(cross-level equivalent test), 그리고 안정성 검사(stability test)를 거쳐 도출해내는 Hudson 등(2015)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요인분석을 통해 인식조사의 여러 문항과 관련된 기저의 요인을 추출하고, 이러한 요인이 시점, 국가, 그리고 시점 및 국가와 상관없이 -즉, 서로 다른 시점의, 서로 다른 국가의, 그리고 서로 다른 시점과 국가의 데이터에서도 동일하게 추출되는 요인인지를 검사하고, 다시 개인 수준의 데이터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수준(서로 다른 시점의 국가를 서로 다른 사회로 놓았을 때), 그리고 국가 수준의 데이터에서도 동일하게 추출되는 요인인지를 검사하며, 이들 검사를 통과했을 때 다시 해당 요인의 정도(요인 점수로 측정되는)와 관련한 국가 간 차이가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는지 -즉, 각 사회의 가치관적 특성이라 볼 수 있을 만큼 그 국가 간 차이가 쉽게 변화하지 않는지- 검사하여,²⁾ 최종적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예로 확정하는 방법이다.

끝으로, 사회적 가치관을 도출한 이후 이를 세대 간에 나타나는 복지태도의 차이와 비교하는 일은 기술통계적이고 시각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적은 사례 수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사회적 가치관은 사회 일반을 가정하는 집합적 지표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Hudson 외(2015)이 스스로 지적하듯이, 추출한 사회적 가치관들은 각 사회가 갖는 가치관적 특성의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 모형을 상정하는 것이 어렵다. 나아가 가치관적 특성이 직접적으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만한 이론적 혹은 선행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수준에서의 통계적 검정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자

2) Hudson 외(2015)은 이를 ‘dynamically stable’한 사회적 가치관의 속성으로 보았으며, Hofstede(2001)와 Jo(2011)의 방법을 따라 각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국가 간 평균 요인점수로 순위를 매겼을 때, 20년의 시간 차를 두고 순위상 관계수가 0.5를 넘는지를 기준으로 살폈다. 여기서도 그와 같은 기준과 방법을 따랐다.

첫 개인수준에서의 속성들로 집단 수준에서의 속성들 간의 관계에 대해 추론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 사례들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복지태도와 가치관적 특성들 사이에 국가 경계를 뛰어 넘는 선형관계를 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도 어렵지만, 복지태도의 균열 구조와 동학에 있어서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른 고유의 논리와 속성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본 연구의 접근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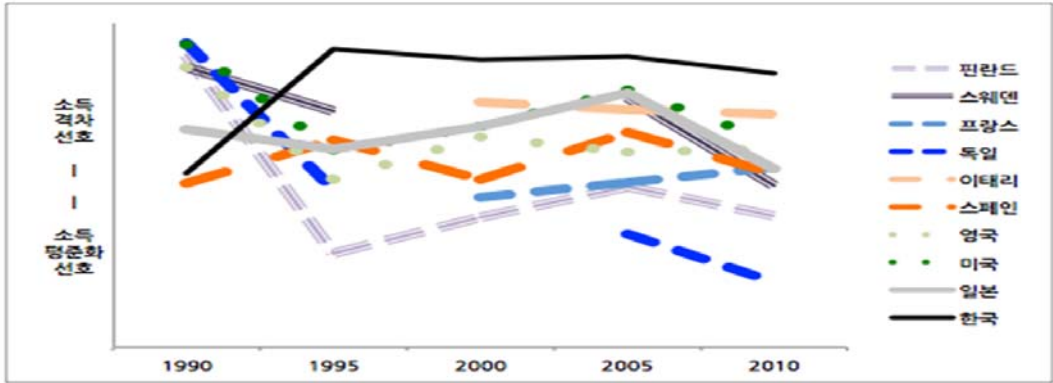
4. 분석 결과

1) 복지태도의 양상과 세대 효과의 추적

지난 20년간 10개국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그림 1 참조), 1990년에서 1995년 급격히 소득격차 선호로 변화한 한국의 사례, 2000년부터 꾸준히 소득격차 선호로 변화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침은 있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스페인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난 20년간 보다 평등한 소득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1995년 이후)과 이탈리아의 경우는 그 변화의 정도가 매우 더더 대상 국가들 중에서는 유인으로서의 소득 격차에 대한 선호가 높은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핀란드, 스웨덴, 독일, 미국의 경우 최근 들어 소득격차의 완화를 선호하는 복지태도로의 변화가 다른 곳에 비해 상당히 급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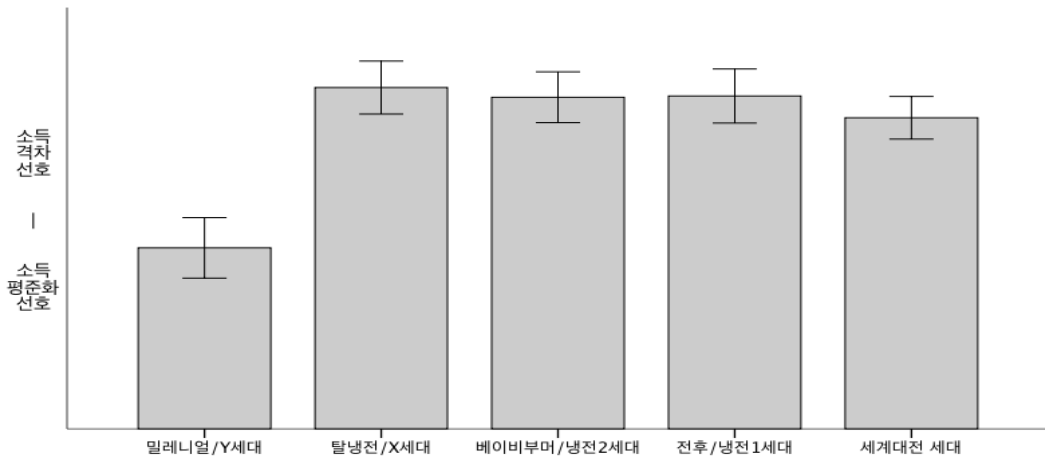
한편, 소득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각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그림 2 참조), 밀레니얼/Y세대가 다른 세대보다는 소득격차 완화에 대한 선호를 조금 더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밀레니얼/Y세대가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유럽 가치관조사의 대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이후 점점 더 많은 응답자를 차지해오고 있을 것임을 생각해보면, 이는 앞서 소득불평등에 태도의 전반적인 변화 흐름(소득 평준화에 대한 선호로의 변화 경향)에 대해 일정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 10개국 국민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1990~2010)



이를 다시 시점별로 들여다보면(표 2 참조), 전체적으로 소득격차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는 1990년과 약하게 나타나는 2010년에서 일정한 기간 효과가 의심되는 가운데, 여기서도 역시 밀레니얼/Y세대가 다른 세대들(세계대전 세대를 제외하고)에 비해 소득 평준화를 더 선호함을 알 수 있다. 1990년에는 다른 세대들보다 소득 평준화를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없었던 세계대전 세대나 전후/냉전1세대가 점차 다른 세대들보다 소득 평준화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은 일정한 연령 효과를 의심하게 한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대 간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세대 효과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 10개국 내 세대별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



*F=18.415; df=4, 61672; sig. at 0.01 level

소득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각 국가별로 살펴 보면(지면 관계상 별도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그림 8 참조) 그림 2와 같이 밀레니얼/Y세대만의 소득평준화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선호를 보이는 국가는 독일, 스웨덴과 영국인데, 이들 중 독일과 스웨덴은 그림 1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체 국민의 소득 격차 완화에 대한 지지가 강해지고 있음을 살펴 본 바 있다. 즉, 세대 간 차이가 사회 전체의 복지태도의 변화를 추동하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음(세대 효과)을 보여준다 하겠다. 하지만 동시에, 독일, 스웨덴과 유사한 밀레니얼/Y세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영국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독일이나 스웨덴과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 것이나, 세대 간에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미국이 전체 국민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빠르게 평준화 선호로 바뀌어 가고 있음은, 역시나 세대효과 외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탐구해 온 복지태도의 결정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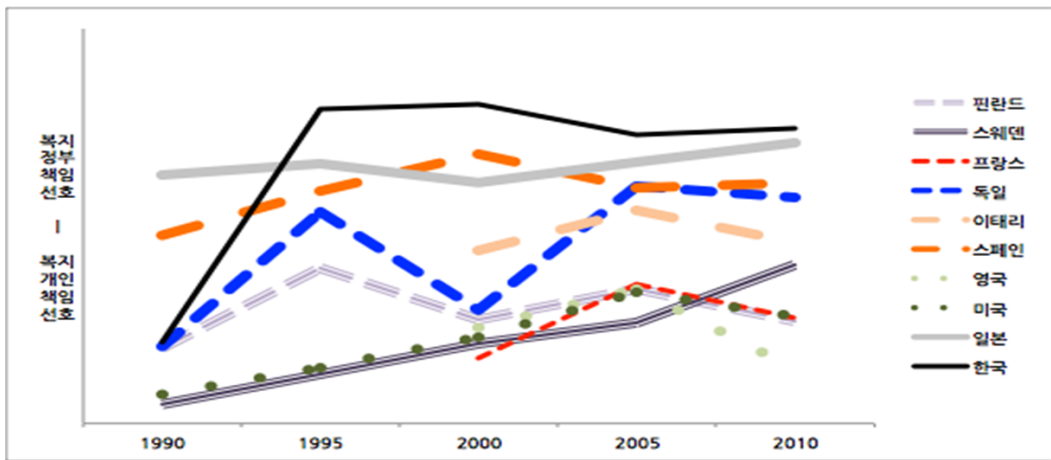
[표 2] 10개국 내 5개 세대의 시점별 소득격차 선호 태도(10점 중 평균과 그 비교)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	6.12	5.39	5.54	5.56	5.19
밀레니얼/Y세대	--	5.14	5.57	5.50	5.18
탈냉전/X세대	6.04	5.52	5.63	5.76	5.30
베이비부머/냉전2세대	6.03	5.45	5.64	5.63	5.23
전후/냉전1세대	6.23	5.51	5.58	5.55	5.10
세계대전 세대	6.13	5.25	5.54	5.42	5.13
	F=3.288; df=3, 14515; p<0.05	F=5.802; df=4, 9888; p<0.01	F=4.374; df=4, 10276; p<0.01	F=6.324; df=4, 11478; p<0.01	F=2.703; df=4, 15492; p<0.05

미국뿐만 아니라,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일본에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있어 세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태리의 경우에는 베이비부머/냉전2세대와 탈냉전/X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큰 소득의 차이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여, 사회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의 안정성의 일부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한국으로, 그림 2와는 정확히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 밀레니얼/Y세대만이 다른 세대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소득격차 선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등장이, 그림 1에서 나타나는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의 급격한 소득격차 선호로의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1995년 이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는 소득격차에 대한 선호라는 양상을 일부 설명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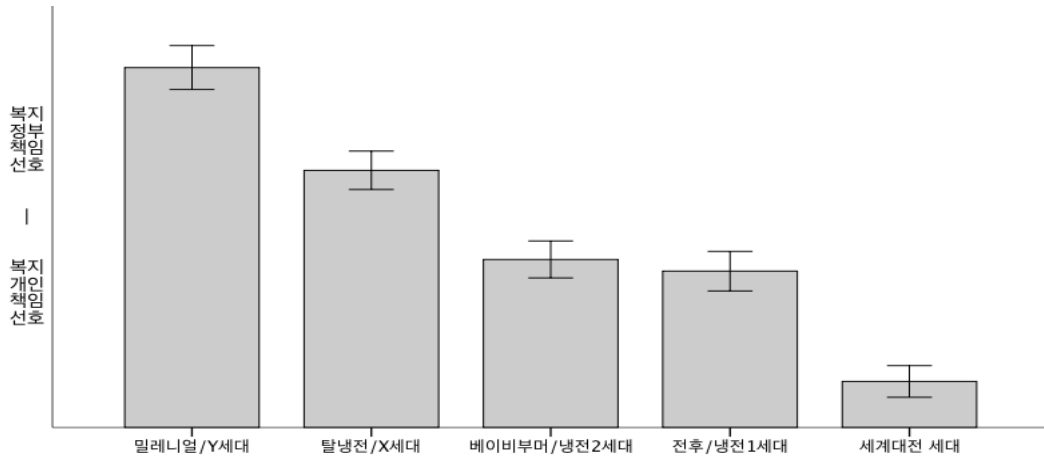
한편,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의 지난 20년간의 양상은, 최근 들어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영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점차 정부책임을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그림 3 참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이 10개국 중 가장 높은 정도로 정부책임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인데, 이는 앞서 소득불평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 것과는 일부 모순적인 점이라 하겠다.

[그림 3] 10개국 국민들의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 (1990~2010)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를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그림 4 참조), 세계대전을 경험한 세대로부터 밀레니얼/Y세대로 오면서 점차 복지의 정부책임을 강조하는 선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앞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더 젊은 세대들이 점차 사회의 중추로 등장하는 추이와 맞물려서 그림 3과 같이 전반적으로 복지의 정부책임을 선호하는 모습으로 변화해 오는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림 4] 10개국 내 세대별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



*F=145.781; df=4, 63928; sig. at 0.01 level

세대별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를 다시 시점별로 들여다보면(표 3 참조), 1990년에 복지의 개인책임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예외적으로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밀레니얼/Y세대가 더 정부의 책임을 선호하고 세계대전 세대가 개인의 책임을 더 선호하는 세대 차이가 뚜렷하고, 그 사이 세대들 사이에서도 더 젊은 세대로 올수록 복지의 정부책임을 더 선호하는 경향성을 읽을 수 있다. 즉, 여기서도 세대 간에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만큼 세대 효과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10개국 내 5개 세대의 시점별 복지의 정부책임 선호 태도(10점 중 평균과 그 비교)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	4.64	5.79	5.34	5.94	5.70
밀레니얼/Y세대	--	5.81	5.65	6.14	5.94
탈냉전/X세대	4.94	6.14	5.49	5.97	5.83
베이비부머/냉전2세대	4.66	5.82	5.31	6.05	5.69
전후/냉전1세대	4.66	5.79	5.44	5.83	5.64
세계대전 세대	4.51	5.54	5.10	5.75	5.37
	F=12.043; df=3, 14522; p<0.01	F=12.882; df=4, 8862; p<0.01	F=14.783; df=4, 13349; p<0.01	F=9.106; df=4, 11576; p<0.01	F=21.478; df=4, 15596; p<0.01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그림 8 참조), 그림 4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곳은 한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인데, 이는 그림 3에서 나타나는 스웨덴과 미국(적어도 2005년까지)의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의 변화 양상(꾸준히 정부책임 선호 강화로 변화)과는 일치하는 반면, 한국의 -10개국 중에서는 가장 정부책임을 지지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책임 선호의 정체/약화는 설명하지 못한다. 밀레니얼/Y세대만의 뚜렷한 정부책임 선호 양상을 보이는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은 전체 복지태도 변화 양상(그림 3)에서도 점차 정부책임 선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세대 간에 차이는 없되 세계대전 경험세대만의 강한 '개인책임 선호'를 보이는 일본은 역으로 점차 이들 세대가 퇴장하면서 정부책임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 핀란드, 영국과 이태리는 세대 간에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에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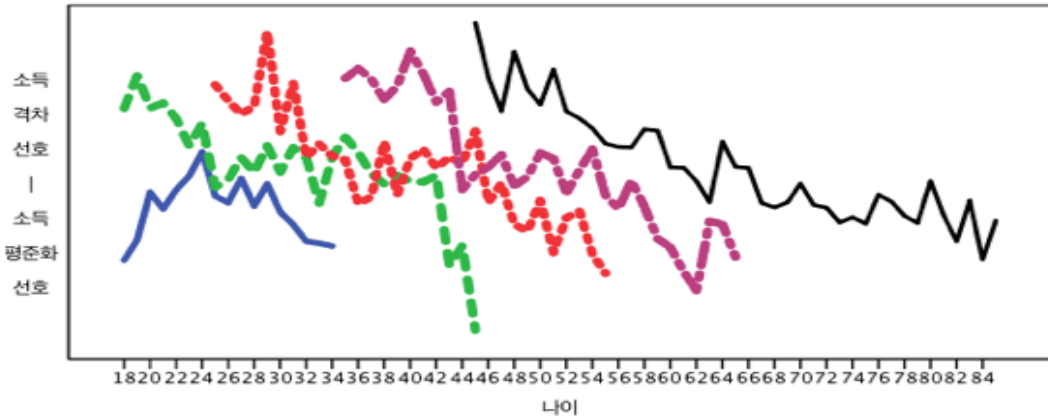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보면, 1990년 이후 10개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복지 지지의 완만한 강화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세대 간에 나타나는 복지태도의 차이가 일정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대 간의 복지태도의 균열 또한 각 세대가 처한 조건과 환경, 그로 인한 이해관계 측면의 변화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굳이 복지태도에 대한 세대 효과라 해석할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복지책임 인식에서의 세대 간의 차이는 단순히 연령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즉 정부 책임에 대한 선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약화되는 것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예외성, 즉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소득격차를 선호하면서 동시에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강화를 가장 선호하는 모순성은 무엇 때문인지도 설명될 필요가 있다. 과연 복지태도에 대해 세대 효과는, 특히 연령 효과와 구분되는, 그리고 이해관계 측면의 요인과는 구분되는, 고유의 영향(코호트 효과)을 가지는가?

2)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의 추적

우선 복지태도의 세대 간 차이가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로 분리될 수 있는지를 연령대별 분석도표(age profile)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Heinemann, 2007). 이 방법은 각 세대 그룹을 나누고 세대 그룹별로 각 연령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사례가 넘는 경우에 한해서 그 평균값들을 취하여 연속선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세대 그룹간 겹치는(overlapped) 연령구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통해 코호트 효과를, 그리고 세대 그룹간 및 전체 선의 흐름을 통해 연령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³⁾ 여기서는 각 연령에 대해 100사례가 넘는 경우만을 취하여 이상값에 의한 평균값 왜곡을 가능한 한 상쇄

(canceling-out)하고자 하였다.

[그림 5]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의 연령대별 분석도표*



* 가장 왼쪽 파란 실선은 밀레니얼/Y세대, 그 바로 위 녹색 점선은 탈냉전/X세대, 그와 일부 겹치며 조금 더 오른쪽에 위치한 적색 점선은 베이비붐/냉전2세대, 그와 일부 겹치며 조금 더 오른쪽에 위치한 자색 점선은 전후/냉전1세대를, 그리고 가장 오른쪽 실선은 세계대전 경험세대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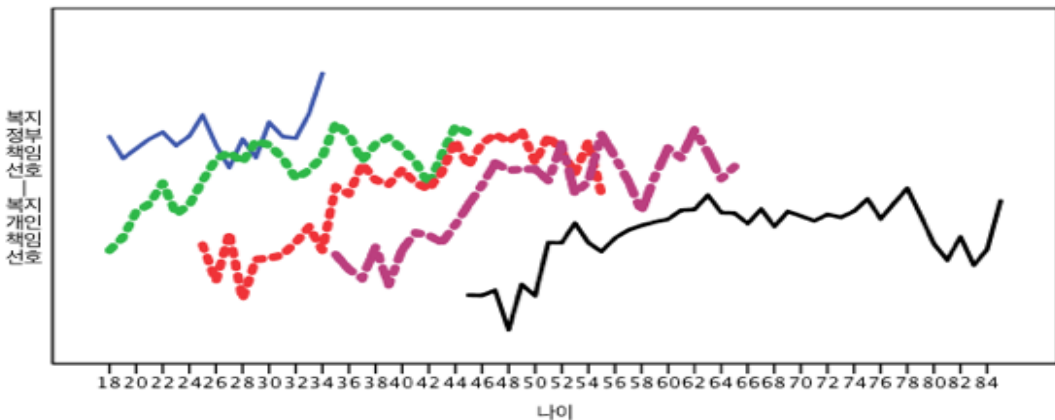
먼저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의 연령대별 분석도표(그림 5)를 살펴보면, 기간 효과인지 세대 간 차이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조사 시점에 따라 모든 세대에서 높게 형성되어 있거나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볼 때, 첫째, 세계대전 경험 세대에서만 약간의 연령 효과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이 세대 안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소득 평준화를 조금씩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다른 세대에서는 그와같은 연령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있어 뚜렷한 연령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어렵다. 둘째, 세대 간에 겹치는 구간에서 뚜렷이 차이가 나는 곳은 두 곳으로, 세계대전 경험세대와 전후/냉전1세대 사이, 그리고 탈냉전/X세대와 밀레니얼/Y세대 사이이다. 즉, 세계대전 경험세대는 이후 세대보다는 소득의 차이를 더 선호하며, 밀레니얼/Y세대는 이전 세대보다는 더 적은 소득격차를 선호한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과 무관하게 세대 그룹 간에 나타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10개국에서는 점차 소득격차 완화를 더 지지하는 복지태도로 변화

3) 이 분석도표에서는 몇 차례에 걸친 조사 데이터가 각 세대별로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 조사 시점의 기간효과가 일부 반영되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가장 젊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별 선에 5개 시점의 조사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선을 대략 5등분하면 각 조사 시점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아무래도 더 많이 반영된 부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때, 특정 위치에서의 특정한 패턴이 모든 세대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연령효과나 코호트 효과이기보다는 기간효과로 추정해 보아야 한다.

해갈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지면에서는 생략했지만, 같은 분석도표를 국가별로 그려보면 이러한 코호트 효과는 개별 국가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핀란드, 일본, 스페인, 미국에서는 연령 효과도 코호트 효과도 찾기 어려운 반면, 독일에서는 모든 세대 간에 젊은 세대로 올수록 점차 소득의 평준화를 더 선호하는 코호트 효과를 발견할 수 있어서, 독일 사회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의 급격한 소득격차 완화 선호로의 변화가 최소한 일부는 코호트 효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영국에서는 세계대전 경험세대의 코호트 효과는 없었으나, 밀레니얼/Y세대만의 소득 평준화 선호에 대한 코호트 효과는 뚜렷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연령 효과는 찾기 어려운 가운데, 밀레니얼/Y세대만이 이전 세대와는 달리 더 큰 소득 차이를 선호하는 코호트 효과를 보여줘, 앞서 살펴 본 한국 밀레니얼/Y세대만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예외성이 적어도 일부는 코호트 효과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림 6]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의 연령대별 분석도표



* 가장 왼쪽 파란 실선은 밀레니얼/Y세대, 그 바로 아래 녹색 점선은 탈냉전/X세대, 그 아래 조금 더 오른쪽에 위치한 적색 점선은 베이비붐/냉전2세대, 그와 일부 겹치며 조금 더 아래 오른쪽에 위치한 자색 점선은 전후/냉전1세대를, 그리고 가장 아래 오른쪽 실선은 세계대전 경험세대를 나타냄.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의 연령대별 분석도표(그림 6)도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탈냉전/X세대, 베이비붐/냉전2세대, 그리고 전후/냉전1세대의 선들이 만나서 이루고 있는 경향선의 흐름을 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씩 복지의 개인책임을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약한 연령 효과를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세계대전 경험세대는 그 이후 세대와는 달리 복지의 개인책임을 더 선

호하는 코호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밀레니얼/Y세대는 그 이전 세대와는 달리 복지의 정부책임을 더 선호하는 코호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 10개국이 모두 이같은 패턴을 공유한다면 이들 사회에서의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고 또 변화해 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10개국 모두가 이러한 패턴을 공유하지는 않았다. 국가별로는 위와 같은 양상의 독일과 프랑스, 세계대전 세대의 코호트 효과만을 보이는 미국, 그리고 더 많은 세대에서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정부책임을 선호하는 코호트 효과를 보이는 스웨덴과 스페인까지는 넓게 보아 위의 패턴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었으며, 이들 5개국이 앞서 살펴 본 복지의 정부책임 선호로의 복지태도의 변화 패턴에 대한 일부 코호트 효과의 설명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반면, 일본, 이태리, 핀란드는 연령 효과나 코호트 효과 모두 명확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영국과 한국은 밀레니얼/Y세대만이 그 이전 세대와는 달리 복지의 개인책임을 더 선호하는 코호트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영국과 한국은 최근에 이르러 개인책임을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복지태도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앞서 살펴 본 바 있어, 이 역시 일부 코호트 효과의 반영이라 추정할 근거를 제공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추정에 근거하여, 코호트 효과가, 각 세대가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환경, 즉 이해관계 측면의 차이 외에,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것처럼 특정 세대의 공유된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화의 결과에 의한 것인지를 복지태도에 대한 예측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선행연구들에 의해 제기된 이해관계 측면의 복지태도 결정요인들 중에서 본 모델에서는 데이터 상에서 가능한 변수를 중심으로,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통제하였으며, 특히 취업여부와 복지지위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한편, 일부 선행연구들이 제기한 가치 측면의 요인들은 뒤에 코호트 효과의 배경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가치관의 탐색을 통해 살펴볼 것이므로 제외하였다. 한편 10개국을 나타내는 국가 변수의 투입은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는 특정 국가를 준거집단으로 삼을 마땅한 기준이 없고, 국가별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한 그림을 그려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통제변수들의 효과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여성일수록 소득불평등 완화와 복지의 정부책임을 지지하였고,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연령의 효과는 나이가 들수록 소득불평등 완화와 복지의 정부책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는데, 그간 복지태도에 대한 연령의 영향은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가 분리되어 탐구된 바가 드물었고, 그 결과도 연구에 따라 상충되어왔기 때문에(박찬웅 외, 2014), 해석이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어느 정도 통제되고, 더하여 세대 간

가치 측면의 차이가 세대변수를 통해 통제되었다고 본다면, 성별과 계층과 세대와 교육수준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애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느낄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자신감의 감소와 불안감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실제 ‘노령’에 대한 불안감의 보편적 공유는 노령에 대한 사회보장이 일찍 발전하고 또 가장 지지받는 근거이기도 하다(van Oorschot, 2000; 2006).

세대 변수 투입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던 연령 효과와 분리된 코호트 효과는, 매우 흥미롭거나 흥미롭지 않게도, 시대의 흐름과 선형 관계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더 오래된 세대로부터 더 최근의 세대로 올수록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국가복지의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투박하게 정리하면, (몇몇 통제되지 못한 주요한 변수들이 있지만) 성별과 연령과 다른 이해관계 측면의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때, 현대 복지국가의 구성원들은 그 세대가 거듭될수록 국가 복지에 대해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국가는 그 건설 및 확대 과정을 통해 일정하게 자기 정당성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해 왔으며, 복지의 축소 혹은 재편 과정은 이를 약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요구와 욕구를 강화시켜온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4] 소득불평등과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의 예측(OLS)⁴⁾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
	비표준화 계수 (SE)	
성별 (남 vs 여)	-.238** (.027)	.196** (.028)
나이 ⁵⁾	-.012** (.002)	.026** (.002)
소득그룹		
저 vs 중	.318** (.033)	-.267** (.034)
저 vs 고	.800** (.038)	-.803** (.040)
교육수준		
저 vs 중	.525** (.035)	-.087* (.036)
저 vs 고	.726** (.039)	-.234** (.041)

4) 각 시점이 갖는 기간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임의절편(random intercept, 통제변수 및 세대 변수가 종속변수인 복지 태도와 갖는 관계가, 특정 시점의 특정한 상황에 따른 기간효과를 제외하고 난 후에도 각 시점에서 다를 수 있다는 가정, 즉 random 기울기는 배제) 다층모델링을 실시하였으나, 임의절편의 분산추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정효과 모델에 비해 향상된 모델적합도를 보였으며,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다층모델에서는 모든 변수에 대한 고정효과 계수의 방향(부호)과 통계적 유의미성은 OLS 모델과 같았다.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다층모형에서는 통제변수들은 OLS모델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세대 변수들 중에서는 전후/냉전1세대만이 유의한 효과를 유지했다.

[표 4] 소득불평등과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의 예측(OLS) (표 계속)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
세대		
대전 세대 vs 전후/냉전1세대	-.687** (.094)	.769** (.053)
vs 베이비붐/냉전2세대	-.444** (.079)	1.087** (.066)
vs 탈냉전/X세대	-.378** (.063)	1.517** (.082)
vs 밀레니얼/Y세대	-.306** (.051)	1.954** (.098)
모델 적합	F=132.973**; df=10, 36571	F=117.185**; df=10, 38535
모델 설명력 (수정된 R제곱)	.035	.029
N	36,572	38,536

*유의수준 0.05; ** 유의수준 0.01

본 지면에서는 생략되었지만, 개별 국가들에 대한 같은 분석은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을 그려주었다. 우선 독일과 일본,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위 표 4의 코호트 효과 패턴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각각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만 위의 코호트 효과가 나타났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정반대의 코호트 효과가, 복지책임에 대한 태도는 위의 코호트 효과 패턴이 나타났다. 이탈리아와 영국에서는 두 복지태도 모두에 대해 코호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에서는 표 4에서 살펴 본 패턴이 전부 혹은 일부 확인되어, 이해관계 측면과 연령효과를 통제하고서도 코호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표 4에서 나타난 패턴과는 다른 양상이라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핀란드에서도 코호트 효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복지태도에 대해 국가별로 다양한 상황과 맥락이 작용하고 있으며, 단일하고 보편적인 코호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5) 세대변수들과 함께 나이변수를 투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상의 공선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본 분석에서도 나이변수와 세대변수 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나이변수를 배제한 모델, 세대변수를 배제한 모델 등을 검토하였으나, 함께 투입되었을 때 나이 변수의 분산팽창계수(VIF)가 6에 미치지 않고, 공선성의 주된 원인은 세대 변수 중 밀레니얼/Y세대 변수(가장 최근의 세대에 대한 변수인만큼 연령차의 반영이 보다 뚜렷할 수밖에 없는 변수) 뿐임을 확인하고 동시에 투입하는 모델로 최종 확정하였다.

3) 코호트 효과의 배경으로서의 세대 간 가치관 균열의 추적

이해 측면의 변수들을 통제한 뒤에도 찾아지는 코호트 효과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은 가치 측면의 요인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주장은 아니어서, 이미 한 사회에 내면화된 문화적 문맥 혹은 가치관적 특성이 복지태도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주장(Jo, 2011; Hudson et al., 2015)이나, 개인이 가진 사회적 신뢰감이나 정치적 이념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들(예로, 최유석, 2011)이 있어왔다. 그렇다면 과연 각 세대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표 5] 10개국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사회적 가치관과 준거 문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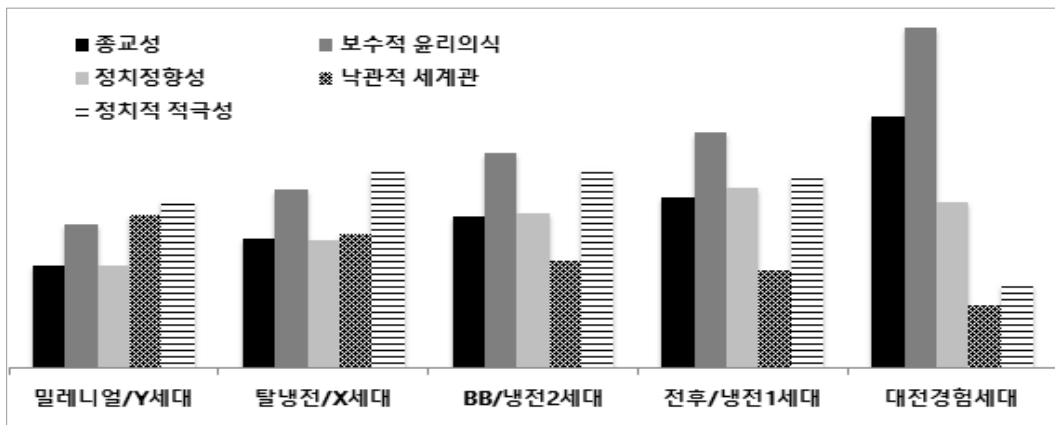
사회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이 근거하고 있는 문항들
종교성	신은 당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당신은 종교적인 사람인가 삶에서 종교는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자주 종교행사에 참석하는가 종교기관에 대한 믿음 아이들에게 종교적 믿음은 중요한 덕목이다
보수적 윤리의식	이혼은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 낙태는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 동성애는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자살은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치 정향성	정치에 대한 관심도 삶에서 정치는 얼마나 중요한가
낙관적 세계관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선택과 통제의 자유를 누린다고 느끼는가 주관적 건강상태
정치적 적극성	보이코트에 참여해 본 경험/참여할 의사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참여해 본 경험/참여할 의사 서명운동에 참여해 본 경험/참여할 의사

여기서 까다로운 점은 가치관 혹은 믿음과 같은 특성이 인식이나 태도와 개념적으로도 쉽게 구분되지 않고 경험적으로 측정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aller(2002)는 보편적, 사회적, 그리고 상황적 가치(관)의 구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것이 순서대로 인류 보편적이고 본성적인 가치들, 다양한 상황에서의 판단에 기준으로 작용하는 가치관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 나타나는 태도를 의미할 때, Jo(2011)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적 특성은 사회적 가치관에

서 찾아져야 하며, 이것이 상황적 가치 혹은 태도와 구분되는 점은 전자는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달리 말해, 후자인 태도는 이해관계의 측면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는다- 점이라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에 근거해 코호트 효과의 배경에 가치 측면의 요인이 있다면 이를 사회적 가치관의 특성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앞서 분석방법에서 논의한 것처럼 Hudson 등(2015)의 ‘사회적 가치관(societal values)’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10개국 데이터로부터 5개의 사회적 가치관의 예를 추출하였다(표 5 참조). 최초 10여개 이상의 문항들로 구성된 20여개 그룹들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검사를 거쳐 시공간적으로 그리고 간-수준 비교가능한 요인을 찾기 위해 많은 문항들과 그룹들이 탈락되면서,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9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각 요인에 대한 국가 간 차이가 쉽게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stability test를 통해 한 사회에 깊게 배태된 가치관적 특성을 보여주는 다섯 사례(사회적 가치관)로 확정되었다.

[그림 7] 10개국 내 세대별 사회적 가치관의 양상*



* 종교성(F=702.113; df=4, 55156), 보수적 윤리의식(F=1535.661; df=4, 68368), 정치정향성(F=161.759; df=4, 62989), 낙관적 세계관(F=252.075; df=4, 62713), 정치적 적극성(F=787.327; df=4, 67907)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함

이들 다섯 개의 사회적 가치관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 세대의 가치관적 특성은 매우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종교성과 보수적 윤리의식, 그리고 낙관적 세계관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세대 흐름에 따라 선형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출생연도가 빠른 세대군일수록 더 강한 종교성과 더 강한 보수적 윤리의식, 그리고 더 낮은 낙관적 세계관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정향성은 세계대전 경험세대보다 전후/냉전1세대가 더 강했고, 이후 세대로 올수록 점

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정치적 적극성은 베이비부머/냉전2세대, 탈냉전/X세대, 그리고 전후/냉전1세대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밀레니얼/Y세대가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세계대전 경험세대만이 뚜렷이 차별될 정도로 낮은 정도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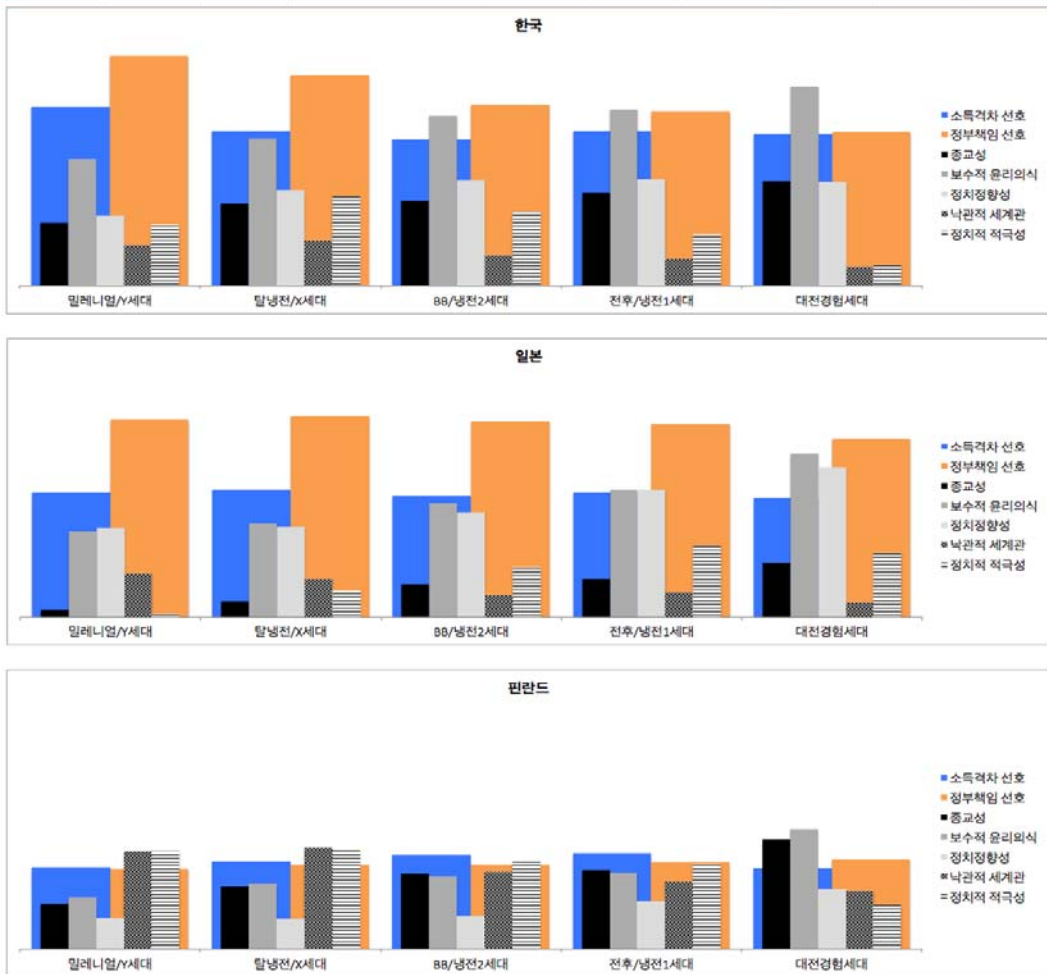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세계대전 경험세대가 대부분의 가치관에 대해서 다른 세대들과는 많은 격차를 나타내는, 즉 가치관적 특성이 보다 뚜렷이 구분되는 세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대 간 가치관 특성의 차이는, 우리가 흔히 ‘68세대’나 ‘민주화 세대’ 등으로 이름붙일 때 가정하는 것처럼 특정한 정치 사회적 경험에 기반한 각 세대만의 고유성이 도드라지기 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선형적 변화의 모습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세계대전 경험세대로부터 밀레니얼/Y세대로 올수록 외부적인 것에 대한 의존이자 동시에 속박(종교적 믿음이나 보수적 사회윤리)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낙관적 세계관)을 가지는 개인주의의 강화 경향을 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대한 시각과 참여의지(정치 정향성이나 정치적 적극성)는 약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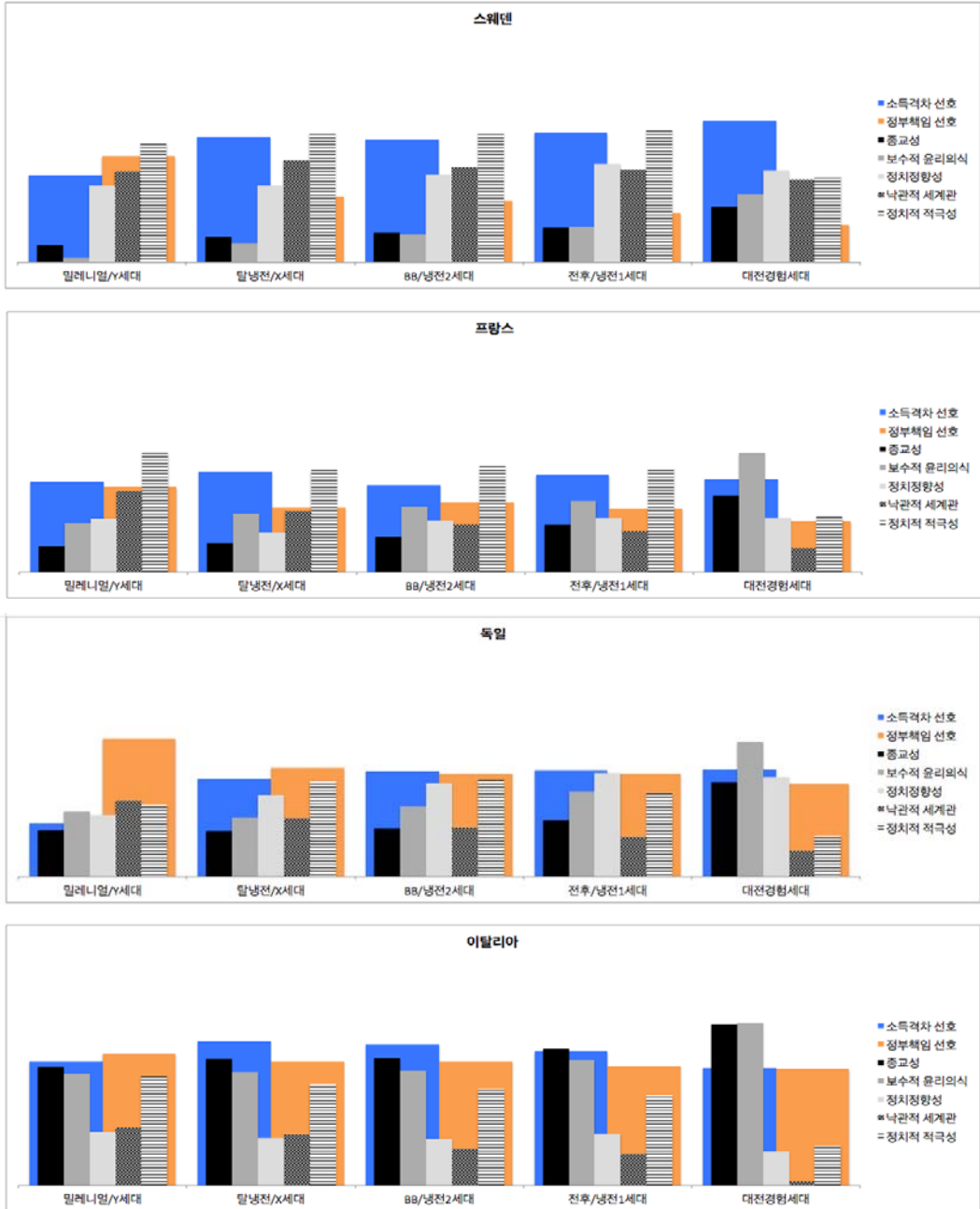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그림 2와 그림 4 참조) 세대 간 복지태도의 차이 -밀레니얼/Y세대의 소득 불평등 완화 선호와, 세계대전 경험세대로부터 밀레니얼/Y세대로 오면서 점차 정부의 복지책임을 선호하는 경향-에 가치관적 특성에 기인하는 코호트 효과가 있다면 이는 빈곤의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종교성과 보수적 사회윤리(Jo, 2011)가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차 약화되고 있는 점과 연관성이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우리가 도출한 사회적 가치관의 예들이 한 사회의 가치관적 특성 전체를 보여주는 못하고(Hudson et al., 2015), 또한 여러 가치관들이 하나의 태도를 형성하는 판단 기준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인 만큼, 특정 가치관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특정 태도에 대한 인과적 영향을 논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코호트 효과의 배경에 세대 간 가치관적 특성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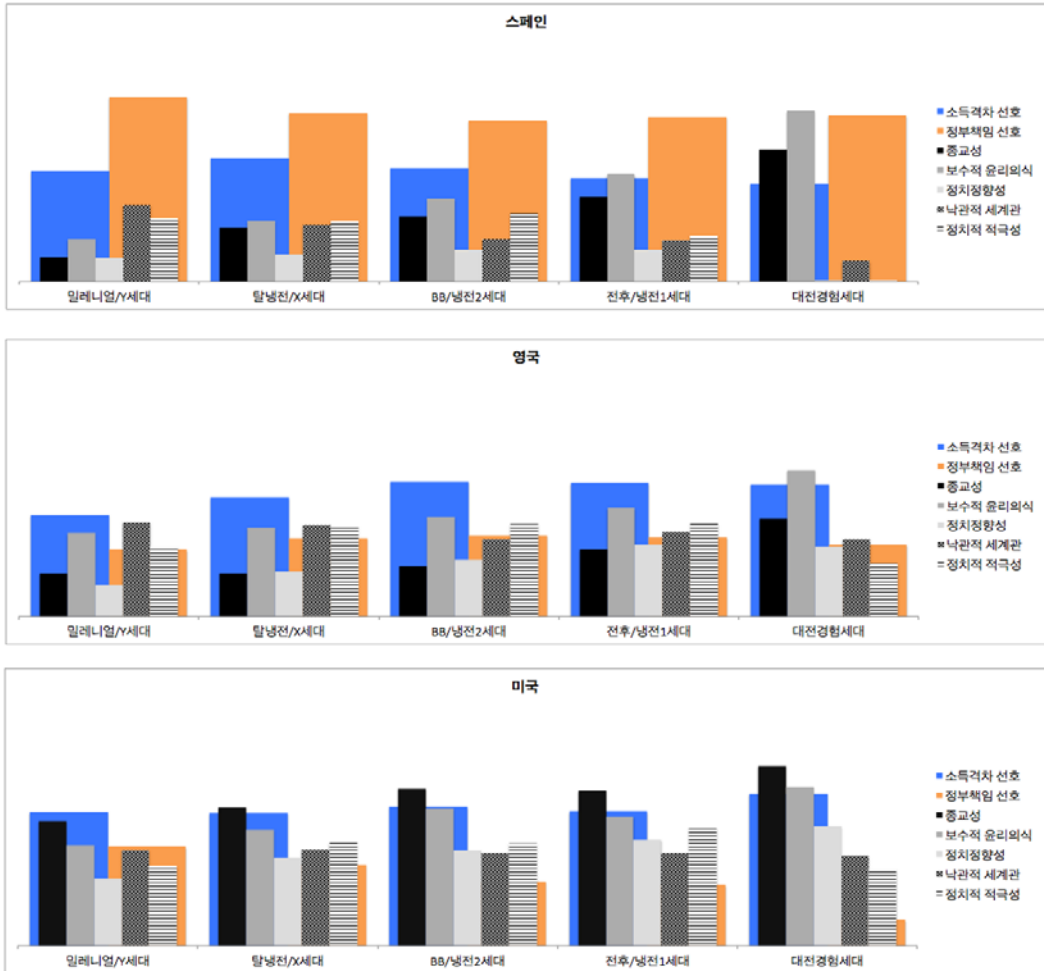
한편 개별 국가들의 세대별 복지태도와 사회적 가치관의 양상을 비교하는 작업은(그림 8 참조), 몇 가지 시사점을 주었다. 첫째, 소득 격차를 선호하는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10개 국가에 대해 모두 같은 단위로 비교 가능하도록 표시되었으므로, 뒷배경을 이루는 파란 막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보수적 윤리의식이 높았다(예외는 스웨덴). 이는 아무래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직업윤리 등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대 간 가치관적 특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국가(핀란드, 독일, 영국)일수록 복지태도에 대한 세대 간 균열도 크지 않았다. 이는 다시 간접적으로 복지태도의 세대 간 균열에 가치관적 특성 차이에 기인한 코호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밀레니얼/Y세대가 가진 복지태도의

예외성 -대표적으로 소득격차를 선호하는 한국, 그리고 다른 세대와는 눈에 띄게 소득평등이나 복지
 지의 정부 책임을 더 선호하는 독일과 스웨덴 은 해당 세대가 가진 가치관적 특성으로는 충분히 설
 명되지 않아, 이들 국가들에서는 특정한 상황과 조건이 해당 세대에게 보다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10개국의 세대별 복지태도와 사회적 가치관의 양상







5. 논의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늘 기존 세대들에게 일정한 긴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긴장에 대해 초기에 새로운 세대를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존재화하기’로 대응하는 통과의례적 과정을 거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다. 지금은 밀레니얼/Y세대가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러한 신세대의 등장은 사회의 복지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더 나아가 세대 간에 복지태도는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른가?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했던 복지태도의 동학과 관련한 질문들이다.

첫째, 복지태도만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친복지의 태도는 지난 20년간 복지국가들 내에서 강화되고 있다. 복지태도의 변화 방향은 소득 격차의 완화와 정부 복지책임의 확대에 대한 지지이다. 물론 이것이 실제 복지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할 만큼 복지 정치의 과정이 단순하지 않고, 복지태도는 복지 정치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요인이며, 더 중요하게는 복지태도는 지난 20년간의 복지의 재편과 축소에 대한 결과로서의 반응이기도 하다. 둘째, 새롭게 등장한 밀레니얼/Y세대는 이전 세대들보다 더 강력한 복지국가 혹은 국가복지의 지지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확연히 더 소득 불평등에 대해 불편해하며, 복지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셋째, 복지태도의 세대 간 균열은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효과이기보다는 코호트 효과에 기인하며, 특히 세대전 경험세대가 이후 세대와 갖는 차별성, 그리고 밀레니얼/Y세대가 이전 세대와 갖는 차별성이 주된 원인이었다. 넷째, 코호트 효과의 배경으로서의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와 변화는 예측 불가능 것이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변화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즉, 가치관의 특성으로 볼 때 밀레니얼/Y세대도, 그리고 그 이전의 어떤 세대도, 기능할 수 없는 낡은 세대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복지태도 변화에 기여하는 가치 측면의 요인은 상당히 안정적인 변수로 작용해왔고 앞으로도 -적어도 가까운 미래까지는-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해 측면의 요인에 영향을 줄 다양한 조건과 환경의 변화를 배제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국가복지의 강화를 선호하는 복지태도로의 변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한국의 예외성은 주목이 필요하다. 비교 대상 10개국 중 한국은 가장 높은 소득격차 선호와 가장 높은 국가복지 선호의 모순되는 복지태도를 보인다. 우선 이러한 복지태도의 모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치 측면의 요인만이 복지태도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해 측면의 요인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복지태도에 더 강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논의한 바처럼 계급 간 갈등이 복지 발전을 추동하지 않았고, 사회복지가 사회충화를 만들어 낼 만큼 역사가 오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복지태도는 여전히 비일관적이고(김영순·여유진, 2011), 소득 격차를 선호할 계급적 이해를 가진 고소득층이 복지확대를 더 지지할 만큼 비계급적이므로(서재욱·김윤태, 2014), 모순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순된 복지태도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한국의 복지태도는 향후에도 복지정치에 있어 유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한국의 밀레니얼/Y세대는 이러한 복지태도의 모순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타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소득격차 선호 및 복지의 정부책임 선호를 동시에 나타내는, 다른 어떤 나라

의 어떤 세대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밀레니얼/Y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정부의 복지책임 확대를 선호하는 현상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경쟁이 확대되어 온 20세기 후반 이래의 사회의 피로감은 공통적으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한 한국 밀레니얼/Y세대들의 고유성은, 오찬호(2013)의 관찰과 해석을 이용하여 보자면, 과도한 경쟁과 그것이 유발하고 있는 과도한 '자기계발'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차별에 찬성하고 차별을 내면화한' 양상을 보이는데 있다. 앞서 전체적인 양상으로도 한국의 모순된 복지태도는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유력한 뒷받침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는데, 한국만의 독특한 밀레니얼/Y세대의 등장은 이러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 김상균, 정원오(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5. 1-33.
- 김수완, 김상진, 강순화(2014). 한국인의 복지정책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0(2). 67-90.
- 김영순, 여유진(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91. 211-240.
- 김희자(1999).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분화. 사회복지정책. 8. 106-124.
- 류진석(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4). 79-101.
- 박재홍(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 박찬웅, 정동철, 조선미, 김노을(2014). 복지인식의 사회적 배태성: 영역별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인에 대한 다수준 분석. 사회보장연구. 30(1). 105-141.
- 백정미, 주은선, 김은지(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 간 비교: 시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 319-344.
- 서재욱, 김윤태(2014). 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 41(1). 95-121.
- 성경룡(2015). 세대균열과 세대연대 - 정치 영역과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차별적 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67(4). 5-29.
- 안상훈(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6(1). 163-193.
- 오찬호(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서울: 개마고원.
- 이상록, 김형관(2013).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세대간 복지태도 차이 및 세대 영향의 분석. 사회과학연구. 29(3). 433-458.
- 이성균(2002).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 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2). 205-228.
- 이준한(2014). 한국 이념의 보수화와 생애주기효과: 2004, 2008,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국제 정치연구. 17(1). 27-48.
- 이현주, 강상경, 김수완, 이선우, 전지현(2013).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연구보고서 2013-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훈희, 김윤태, 이원지(2011). 한국의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의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7(2). 1-25.
- 전상진(2004). 세대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38(5). 31-52.
- 정현태, 오윤수(2009).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한국인의 복지의식: 롤즈의 정의론 관점. 사회복지정책. 36(1). 329-353.
- 조남경(2013). 사회복지의 문화적 토대, 복지태도, 그리고 문화적 문맥: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있어 세 가

- 지 문화적 접근의 현황과 과제. *비판사회정책*. 39. 235-273.
- 조돈문(2001).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 효과. *산업노동연구*. 7(1). 157-191.
- 최균, 류진석(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 223-254.
- 최유석(2011).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57-83.
- Andreß, H.-J. & Heien, T. (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4). 337-56.
- Arts, W. & Gelissen, J. (2001). Welfare States, solidarity and justice principles: Does the type really matter? *Acta Sociologica*. 44. 283-99.
- _____(2002).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or more? A state-of-the-art repor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2(2). 137-58.
- Blekesaune, M. & Quadagno, J. (2003).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5). 415-427.
- Bussemeyer, R., Goerres, A. & Weschle, S. (2009).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ve spending in an era of demographic ageing: The rival pressures from age and income in 14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3). 195-212.
- Cnaan, A., Hasenfeld, Y., Cnaan, A. & Rafferty, J. (1993). Cross-cultural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welfare-state programs: Path analysis with log-linear model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9. 123-152.
- Fishman, A. (2016). How generational differences will impact America's aging workforce: Strategies for dealing with aging millennials, generation x, and baby boomers. *Strategic HR Review*. 15(6). 250-257.
- Gundelach, P. (1994). National value differences: Modernization or industri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35(1-2). 37-58.
- Halpern, D. (2001). Moral values, social trust and inequality: Can values explain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1. 236-251.
- Heinemann, F. (2007). *Is the welfare state self-destructive? A study of government benefit morale*, discussion paper no. 07-029.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ZEW).
- Hudson, J., Jo, K. & Keung, A. (2015). *Culture and the politics of welfare: Exploring societal values and social choic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Inglehart, R. (2000). Culture and democracy, In L. Harrison & S. Huntington(eds).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York: Basic Books (80-97).
- Jo, K. (2011). Between the cultural foundations of welfare and welfare attitudes: A possibility of an

- in-between level conception of culture for the cultural analysis of welfar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1(1)*, 5-19.
- Larsen, A. (2006). *The institutional logic of welfare attitudes: How welfare regimes influence public support*. Aldershot: Ashgate.
- Pfau-Effinger, B. (2005). Culture and welfare state policies: Reflections on a complex interrelation. *Journal of Social Policy*, *34(1)*, 3-20.
- Sorensen, J. (2013). Does aging affect preferences for welfare spending? A study of peoples' spending preferences in 22 countries, 1985-2006.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9*, 259-271.
- Svallfors, S. (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3)*, 283-304.
- van Oorschot, W. (2000). Who should get what, and why? On deservingness criteria and the conditionality of solidarity among the public. *Policy & Politics*, *28(1)*, 33-48.
- _____(2006) Making the difference in social europe: Deservingness perceptions among citizens of european welfare stat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6(1)*, 23-42.
- EVS (2015). European values study longitudinal data file 1981-2008 (EVS 1981-2008). GESIS Data Archive, Cologne. ZA4804 Data file Version 3.0.0,doi:10.4232/1.12253
- WORLD VALUES SURVEY 1981-2014 LONGITUDINAL AGGREGATE v.20150418.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ww.worldvaluessurvey.org). Aggregate File Producer: JDSystems, Madrid SPAIN.

◀ Abstract ▶

A Study of the Generational Cleavage in Welfare Attitudes: Differentiating Cohort Effect from Age Effect and Finding Its Factors

Jo, Nam Kyoung*

It is attempted here to explain change in welfare attitudes for two decades in 10 countries with the cohort effect, especially differences in societal values between generations. It was found that for the last 20 years pro-welfare attitudes of the public has been strengthened, on which the generation has impact, more by the cohort effect than by the age effect, and that the Millennials/Y-generation are the strongest supporters for the state welfare. Value-differences between cohorts, as a background factor for the cohort effect on welfare attitudes, are clear but show a kind of linear trend from the older to the younger cohorts. As for the cohort effect on welfare attitudes, it is expected, at least for the short-term future, in the direction toward supporting the expansion of the state welfare. Korean welfare attitudes show an exceptional pattern - preferring income inequality as incentives, and at the same time, the expansion of governmental welfare responsibility, which echoes recent arguments of contradictoriness and non-class-orientedness of Korean welfare attitudes. Especially, Korean Millennials/Y-G shows this contradictory welfare attitudes the most strongly, which is unique between 10 countries in this study, implying their fierce competition is being internalized. It is expected that the contradictoriness of Korean welfare attitudes may limit its possibility to back up welfare expansion in Korea.

Key Words: welfare attitudes, generational effect, age effect, cohort effect, values

◆ 2017. 4. 13. 접수 / 2017. 6. 8. 1차수정 / 2017. 6. 22. 게재확정

* SungKongHoe University(namk.jo@skhu.ac.kr)